

II.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

7개국 종합

- <각국 예산안 분석>에서는 주요 7개국(미국, 캐나다, 일본, 프랑스, 독일, 영국, 호주)의 2011년 혹은 2011-12년 예산안을 분석하였으나, 예산주기의 차이로 인해 캐나다, 영국, 호주는 2010년 봄에 발표한 FY2010-11 예산안을 분석하였음
 - 따라서 캐나다, 영국, 호주의 경우, 2011년 1월 현재 시점에서 실제 정부의 입장이 FY2010-11 예산안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
 - 반면, 미국은 가장 빨리 FY2012 예산안을 발표하므로, 향후 경제 및 재정전망 등 다른 국가들의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되는 변수들을 살펴 볼 수 있음

<표 II-1> 각 국 예산안 일정

국가	예산안	회계년도	예산안 발표 시기
미국	FY2012	2011. 10 - 2012. 9	2011. 2. 14
캐나다*	FY2010-11	2010. 4 - 2011. 3	2010. 3. 4
일본	FY2011/12	2011. 4 - 2012. 3	2011. 1. 24 (국회심의 개시)
프랑스	FY2011	2011. 1 - 2011. 12	2010. 12. 20
독일	FY2011	2011. 1 - 2011. 12	2010. 11. 26
영국*	FY2010-11	2010. 4 - 2011. 3	2010. 6. 22
호주*	FY2010-11	2010. 7 - 2011. 6	2010. 5. 11

주: *는 2010년 봄에 발표한 FY2010-11 예산안을 분석하였음

- IMF Fiscal Monitor(2010년 10월)에 발표된 2011년 재정전망(GDP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)에 따르면, 주요 7개국은 2011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국가부채는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에서는 계속 증가할 전망

<표 II-2> 2011년 재정전망

국가	GDP 대비 재정수지(%)		GDP 대비 국가부채(%)	
	2010년	2011년	2010년	2011년
미국	-11.1	-9.7	92.7	99.3
캐나다	-4.9	-2.9	81.7	80.5
일본	-9.6	-8.9	225.8	234.1
프랑스	-8.0	-6.0	84.2	87.6
독일	-4.5	-3.7	75.3	76.5
영국	-10.2	-8.1	76.7	81.9
호주	-2.8	-0.8	21.9	23.7

□ 미국, 일본과 캐나다를 제외한 호주 및 유럽 3개국(독일, 프랑스, 영국)은 2011년 본격적으로 재정건전화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, 그 원인 및 대응방식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

○ 먼저 미국은 2012년 예산안에서 미래 경제동력에의 투자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나, 재정건전화 목표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음

-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분야(교육, 인프라, R&D)에 대한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
- 2021년까지 재정적자를 3.1%로 낮추겠다는 목표(2010년 현재 11%)는 실현가능한 것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정으로 하여 설정
- 베이붐세대가 은퇴하고 연금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

○ 일본은 2011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% 초반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고용과 성장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을 취함

-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고용을 제외한 복지지출을 대폭

늘렸는데 반해 총지출 증가율은 0.1%에 그침

- 즉, 복지지출을 증가시킨 대신 다른 지출항목들(특히 공공사업, 지방교부금, 경제 긴급대응 예비비 등)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였음

○ 캐나다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양호하고,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2개년 경기부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세출이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

-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15-16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며,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실업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중

○ 호주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양호하고, 경기부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캐나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건전화를 꾀하고 있음

- 2009년 초, 경기부양책을 수립할 때도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주력하는 정책을 세우면서도, 경제가 회복되면 바로 지출증가율을 통제하도록 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재정전략을 수행

- 따라서 2009년 경기부양책 이후, 2010년부터 실질지출증가율을 2% 이내로 통제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FY2012-13에 재정흑자로 돌아설 것 전망

○ 반면, 독일, 프랑스, 영국 이하 유럽 3개국은 2011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약간 둔화됨에도 불구하고, 복지지출 감소 등 적극적인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임

-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0년 7.7%였던 재정적자(프랑스 정부 통계)를 2011년 4.3%까지 대폭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여 대대적인 정부지출 감소 및 복지지출 감소 정책을 시행할 예정

- 각종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키고,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0.6%로 설정하였으며, 의료비 지출증가율 3%로 통제, 연금개혁 등을 통해 의무지출

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지출 축소를 피함

- 독일은 2011년 예산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예산임을 분명히 하고, 거의 모든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였는데, 특히 복지지출 관련 예산삭감이 가장 큰 것이 눈에 띈
 - 노동 및 사회복지 예산을 2010년 대비 8.3%나 삭감(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지급하던 연금보험 삭감, 실업수당 축소, 양육보조금 폐지 등)하였고, 보건 및 가족지원, 재무부 및 교통건설부 예산도 삭감하였음
 - 이러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, 교육부 예산은 7.2%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증가할 유일한 항목
- 영국은 복지지출 감소 등 지출을 삭감하여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복지혜택은 증가하였고, 법인세 인하, 인프라 구축,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성장을 위한 지출은 증가 허용
 - 수령연령 인상, 아동급여 동결, 사회보장급여 한도 제한 등을 시행

1. 미국 (FY 2012: 2011. 10~2012. 9)
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, R&D 투자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더불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 추구
--

경제 및 재정전망

- (경제전망)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은 2011년과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
- (재정전망)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FY2012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33.1% 감소한 1조 1,010억달러 전망

<표 11-3>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

(단위: %)

경제전망 ¹⁾	2011	2012	2013	2014
실질 GDP 성장률	2.7	3.6	4.4	4.3
CPI	1.3	1.8	1.9	2.0
실업률	9.3	8.6	7.5	6.6
재정전망 ¹⁾ (GDP 대비)	2011	2012	2013	2014
재정수입	14.4	16.6	17.9	18.7
재정지출	25.3	23.6	22.5	22.4
재정적자	10.9	7.0	4.6	3.6

주 1) 경제전망: 1월 1일~12월 31일, 재정전망: 10월 1일~9월 30일(회계연도)
 자료: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, OMB, 2011. 2

예산기조: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자 감축에 주안점으로 두고 작성

- 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
- ② 재정건전화

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

- FY201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.9% 증가한 2조 6,274억달러(GDP의 16.6%) 전망
- 총 3조 7,290억달러 규모의 FY2012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교육, 산업, 인프라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하고, 이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

주요 재정정책

- 국가경쟁력 제고
 - 교육, 산업, 청정에너지, 인프라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지출 확대
- 재정건전화

- 비안보 재량지출 및 공무원 임금 동결, 재정사업 통합, 국방지출 삭감과 함께 세제개혁,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을 제안

○ 복지지출 관리 정책

- FY2012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 개혁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
- 다만,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냉난방비 보조사업,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등을 삭감

2. 캐나다 (FY 2011: 2011. 4~2012. 3)

□ 경제 및 재정전망

- (경제전망) 2010년 10월 현재, 2011년 경제성장률을 2.5%로 예측, 실업률은 7.7%, 물가는 2.2%로 전망
- (재정전망) FY2011 재정적자는 298억캐나다달러(GDP대비 1.8%)로 전망하며 정부 부채는 35.3%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FY2015에는 30.8%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임

<표 II-4> 캐나다 경제전망(2010. 10)

(단위 : %)

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0 ~2014
실질GDP 성장률	3.0	2.5	2.8	2.9	2.6	2.5	2.8
실업률	8.0	7.7	7.4	7.0	6.8	6.6	7.4
소비자물가	1.7	2.2	2.1	2.1	2.0	2.0	2.0

자료 : "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," 캐나다 재무부, 2010년 10월

<표 II-5> 캐나다 재정전망(2010. 10)

(단위 : 억캐나다달러)

	2010~11	2011~12	2012~13	2013~14	2014~15	2015~16
총세입	2,325	2,463	2,612	2,777	2,932	3,059
총지출	2,778	2,761	2,825	2,892	2,950	3,033
재정수지	-454	-298	-212	-115	-17	26
부채	5,645	5,942	6,155	6,270	6,287	6,261

자료 : "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," 캐나다 재무부, 2010년 10월

□ 예산안 내용

- (세입) FY2010 총세입은 2,325억캐나다달러(GDP 대비 14.4%), FY2011에는 2,463억캐나다달러(GDP 대비 14.6%)로 증가하며 차후 연평균 5.6%씩 상승할 전망
- (세출) FY2010 프로그램지출은 2,466억캐나다달러(GDP 대비 15.3%)이며 경기부양책이 종결되면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FY2015에는 GDP 대비 13.0%로 하락할 전망
 - 이전지출비용, 자본상각 및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된 직접 프로그램지출(direct program expenses)은 FY2011에 전년대비 56억캐나다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
 - 경기부양책 종료시점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차츰 감소하고 기계·장비 구입으로 동 기간 자본 상각비용은 소폭 증가
 - 기타 직접 프로그램지출로 근로자연금 및 혜택, 캐나다 국방부의 임금 외 지출, 악성부채 공제액 등이 포함

□ 복지지출 관리 정책

- 정부는 변경된 캐나다 연금계획(CPP)에 대한 최종 승인(royal assent)을 받아 2011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점차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며,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 연금 납부액을 증가시킬 전망
-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 100달러 당 1.73달러로 동결시켰던 고용보험료(Employment Insurance Premium)를 2011년에는 소득 100달러 당 5센트, 2012부터는 연간 10센트씩 인상하기로 함

3. 일본 (FY 2011: 2011. 4~2012. 3)

□ 경제 및 재정전망

-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려 왔던 일본 경제는 2011년도에도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, 재정 악화 등 만만치 않은 경제 불안요소들이 존재
- 더불어, 세계경제가 2010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역시 2011년도에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여, 1%대의 낮은 성장률로 예측
 - 일본 중앙은행 1.8%, 국제통화기금(IMF) 1.5%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1.7%, 도쿄미쓰비시은행 1.0%, 미즈호은행 1.3%, 노무라증권 1.2%
- 계속되는 위기대응 및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2011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7.1%를 기록할 전망
- 2011년도 채권잔액은 2010년 대비 약 26조엔 증가할 전망 (GDP 대비 138%)

□ 예산구조: 2011년 예산은 정권 교체 후 최초의 본격적인 편성으로 지난 6월에 발표된 「신성장전략」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구성의 네 가지 기준 및 틀을 발표

- i. 각 부처는 디플레이션 극복하고 경제성장 촉진 사업, 고용확대 사업, 인재육성 및 국민생활 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해야 함
- ii. 낭비를 근절하도록 총예산 편성
- iii. 2010년 6월에 발표한 「재정운영전략」에 따라 세출대상 경비는 약 71조엔, 국채발행액은 약 44조엔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
- iv. 각 부처 간의 예산요구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예산편성 전반의 투명성 강화

□ 예산안 내용

- FY2011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,124억엔(0.1%) 증가한 92조 4,116억엔 수준으로

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동일

- FY2011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약 71조는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신성장전략 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

□ 주요 재정정책

○ 경제위기 대응 조치

- 1단계: 「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」을 발표 (2010. 9. 9)
 - 급속한 엔고 및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고용 대책에 중점을 두고, 2010년도에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
- 2단계: 「엔고·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」 발표 (2010. 10. 8)
 - 2011년도 “건강한 일본, 부활 특별 경제”를 위한 시책사업을 1) 고용 인재 육성, 2) 신성장 전략의 추진 가속, 3) 육아·의료·개호·복지 강화, 4) 지역활성화·사회자본 정비·중소기업 대책, 5) 규제·제도 개혁이라는 5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추진
- 3단계: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 (2010. 12. 16)
 - 법인세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, 우선 내년에 5%p 인하
 - 중소기업 경감세율을 3%p 할인

○ 재정건전화

- 재원확보 원칙(PAYGO 원칙), 재정적자 감축 원칙 등 5가지 기본원칙을 따르는 「중기재정운영전략」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음

○ 복지지출 관리 정책

- 복지감축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위기 후에도 일본의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
- 사회보장 관련 비용 중 특히, 자녀수당 확대를 중점으로 복지부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6,693억엔(13.2%) 정도 크게 증가

4. 프랑스 (FY 2011: 2011. 1 ~ 2011. 12)

□ 경제 및 재정전망

- (경제전망) 2010년 2사분기부터 0.7%의 성장률(1사분기 성장률 0.2%)을 기록하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음
 - 2010년과 2011년, 프랑스의 경제는 각각 1.5%와 2.0%의 성장률을 보이며 서서히 회복할 전망
- (재정전망) GDP 대비 세출은 감소하고 세입은 증가하여, 2010년 7.7%이던 재정적자가 2011년 4.3%로 크게 감소하고, 2014년 1.8%까지 개선될 전망

<표 II-6> 프랑스 2009-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

(단위:%, 10억유로)

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GDP 대비 세출	21.4	24.6	20.4	19.8	19.4	18.9
GDP 대비 세입	15.1	16.9	16.1	16.5	17	17.1
GDP대비 재정수지	-6.2	-7.7	-4.3	-3.4	-2.4	-1.8
재정수지	-117.6	-150	-86.4	-70.7	-52.3	-42.3
GDP 대비 국가부채 ¹⁾	78.1	82.9	86.2	87.4	86.8	85.3

주: 1)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
 자료: LPFP 2011-2014

- 그러나 채무비율은 경기침체,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2010년 GDP 대비 82.9%에서 2011년 86.2%로 증가할 전망

□ 예산 기초

- 2011년 예산법안(LF 2011)은 2% 성장률과 1.5% 물가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며, 공공지출 안정화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GDP 대비 6%(916억유로)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

□ 예산안 내용

- (세입) 2011년 순세입은 201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, 경기회복으로 인한 5.6%의 순세입 증가와 세제혜택 축소 정책으로 인해 17억유로 세입 증가
- (세출)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목표로 지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거의 유사

□ 주요 재정정책

- (재정건전화) 채무와 연금 관련 비용을 제외한 지출 안정화로 연평균 0.6%의 지출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2011년부터 시행되는 100억유로에 달하는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
- (2011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)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지출 통제(의료비 지출 통제, 연금개혁) 등으로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재정적자를 감축하고자 함
 - 의료 관련: 의료비 지출증가율의 통제 강화(의료보험의 효율성의 제고와 고가 진료환자의 보험료 반환 등을 통해 2011년 의료비 지출증가율 3% 목표)
 - 연금 관련: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연금개혁법은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하고, 연금 100% 수급 개시일도 65세에서 최저 67세로 늦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

5. 독일 (FY 2011: 2011. 1~2011. 12)

□ 경제 및 재정전망

- (경제전망) 2011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2.2%로 전망되며, 실업률은 6.7%로 전년대비 0.6%p 하락, 물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
- (재정전망) 2011년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.3% 감소한 3,058억유로로 추정되며,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.6% 증가한 2,574억유로, 신규차입은 약 484억유로로 전년에 비해 39.7%나 감소

<표 II-7>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

(경제전망: 전년대비%, 재정전망: 10억유로, 재정수지: %)

경제전망	2009	2010	2011
실질GDP성장률	-4.7	3.7	2.2
실업률	7.5	7.3	6.7
CPI	0.2	1.1	1.8
재정전망	2009	2010	2011
재정지출	292.3	319.5	305.8
재정수입 중 신규차입	34.1	80.2	48.4
재정수지	-3.0	-3.5	-2.3

경제전망 : EU집행위원회, European Economic Forecast, 2010. 11

재정전망 : 독일 재무부, 2010. 12

재정수지 : IFO(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), Economic Forecast, 2010. 12

□ 예산기조

-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긴축예산과 재정건전화계획 실시하며,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규차입 규모를 줄여 2016년까지 재정목표(GDP의 0.35% 이하)를 달성할 계획
- 사회보장 지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, 에너지산업 부문 세율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

□ 예산안 내용

- (세입) 2011년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, 신규차입금이 대폭 감소하여 총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
- (세출) 세출예산은 3,058억유로로 전년 대비 4.3% 감소한 규모이며, 특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절감분(8.3%)이 가장 큼

□ 주요정책

- (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) 2010년도 독일경제는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고, 2011년도부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정책을 실시
- (재정건전화) 독일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(Zukunftspaket)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법률 제·개정안을 마련함
 - 안정화위원회(Stabilitätsrat)를 통해 연방 및 주 정부의 현 재정상황과 재정운용 계획을 파악하고, 예산 모니터링 실시
- (복지관리정책) 독일정부의 2011년 긴축예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복지관리정책 실시

6. 영국 (FY 2011-12: 2011. 4~2012. 3)

□ 경제 및 재정전망

-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1970~1990년대 경기회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
 - 2010년 GDP 성장률은 2010년 6월 전망치보다 0.6%p 높은 1.8%로 전망하고, 2011년은 6월 전망치보다 0.2%p 감소한 2.1%로 전망
-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2010년 3.2%에서 2012년 1.9%로 감소하고, 고용시장 개선으로 실업률은 2011년 8%에서 2015년 6%로 하락할 전망
- 전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FY2009-10 공공부문순차입 GDP 비중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
- 공공부문 순부채 GDP 비중은 FY2011-12에 60.8%로 예측하고 FY2013-14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

□ 예산기준

- 2010년 예산안은 책임, 자유, 공정성을 기조로 재정적자 감축 규모 확대,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,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계획 수립
 - FY2011-12에 지출삭감 150억파운드, 세금인상 62억파운드 계획
 - 현행 28%의 법인세율을 FY2011-12부터 4년간 매년 1%씩 인하
 - 2011년 4월부터 국가기초연금은 소득, 가격, 2.5% 중 최대치에 연동
- 2010년 중기재정계획(Spending Review 2010)에서는 정책기조를 성장, 공정성, 개혁, 국방 및 안보로 설정
 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, 수출, 투자, 기업 지원
 - 사회적 보호(social care) 지원을 위해 FY2014-15 기준 연간 2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재원 배정 등
 - 지방정부의 예산 관리 자율성 강화, 중앙정부 행정예산 34% 삭감 등
 - 해외원조 지출 중 국제적 갈등 완화를 위한 지출비중을 30%로 확대,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4년간 총 6억 5천만파운드 신규 배정

□ 세입 및 지출

- 2010년 예산안, FY2010-11 경상세입 약 5,477억파운드(GDP의 37.2%)로 예측
 - 예산책임청(OBR)은 가을 경제·재정전망에서 FY2010-11 경상세입을 2010년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증가한 5,497억파운드(GDP의 37.1%)로 전망
- 2010년 예산안, FY2010-11 총관리지출(TME)은 3월 예산안보다 약 72억파운드 감소한 6,968억파운드(GDP의 47.1%)
 -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FY2011-12부터 4년간 지출계획을 6월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상향조정
 - 복지지출 삭감 등 연간관리지출(AME) 억제 정책으로 FY2015-16 연간관리지출이 6월 예산안보다 약 106억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예측

□ 주요 재정정책

-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
 - 총 2,000억파운드 규모의 국가 인프라구축 계획(National Infrastructure Plan)
 - 지방정부 차입 권한 확대(Tax Increment)
 - 예산안 2011에서 법인세 기본세율을 24% 인하 방침을 확정할 계획
- 재정건전화
 - 약 62억파운드의 FY2010-11 지출삭감(saving package) 계획 발표
 - 복지예산 연간 70억파운드 추가 삭감(Spending Review 2010)
- 복지지출 관리 정책
 - (의료) 국가의료서비스(NHS) 지출의 실질인상 보장하고 효율화 프로그램 및 의료제도개혁으로 지출 감축 노력
 - (연금)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 기준 변경
 - (기타 복지)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액의 상한 설정 및 다양한 복지급여의 단일화(Universal Credit) 추진 등

7. 호주 (FY 2010-11: 2010. 4~2011. 3)

□ 경제 및 재정전망

-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자력 회복, 실업률 하락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
- 추세를 상회하는 경제성장과 실질지출증가율 제한 조치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FY2012-13에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

□ 예산기조: FY2010-11 예산안은 “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예산 흑자로의 빠른 전환 (Responsible Management and a Faster Return to Surplus)”이라는 예산기조 아래 다음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

- 근로가구의 생계비용 완화 및 세제 간소화
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투자 및 인프라 건설 확대
-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
- 자원세(Resource Tax) 도입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치로 경제성장 가속화
-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(Superannuation)제도 개혁
-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의료개혁 수행

□ 예산안 내용 (세입·세출 내역)

- FY2010-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대비 9.4% 증가한 수준인 3,218억호주달러 (GDP 대비 22.9%)로 전망
- FY2010-11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.4% 증가한 수준인 3,546억호주달러 (GDP 대비 25.2%)로 전망
 - FY2008-09 및 FY2009-10에 추진된 경기부양책의 종료로 향후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

□ 주요 재정정책

○ 경기부양

- 호주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08-09 및 FY2009-10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거의 종료
- FY2010-11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발표하지 않고 이전에 수행했던 정책 중 교육,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, 교통·통신분야 등 크게 3분야에만 금번 예산에 영향을 미침

○ 경제성장

- 호주정부는 자원세 도입과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경제성장을 가속화

○ 재정건전화

- 실질지출증가율을 2%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규율 강화

○ 복지지출 관리 정책

- (연금 관련) 호주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(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)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을 2009년 5월에 발표